

## 行政體制의 單一簡素化



이 창 건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위원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는 더욱 아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착할 수도 있고 악마같이 선량한 채하면서 악덕스러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다. 어느 정권이나 출범 초기엔 모두 장미빛 구호를 내걸고 달콤한 약속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사이 언젠지도 모르게 정권을 잡기 전 그렇게도 규탄하던 바로 그 대상과 비슷한 추한 모습으로 타락하고 마는 경우가 흔한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신 속에 내재된 악마적 속성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의 문민정부는 지난날의 정권과는 달리 절차상 하자 없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모처럼 국내외적인 축복 속에 출범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에선 혈통의 정통성보다는 업

적과 도덕성을 우선 참작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아무리 떳떳하게 출범한 정권이라도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최고의 加重值를 얻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족보가 필요조건은 될망정 충분조건 구실은 하지 못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날 사생아처럼 태어난 정권이 경제개발에 주력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후한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은가.

### 割據主義의 是正

새 정부와 더불어 모두가 명심하여야 할 사항은 부정부패의 척결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단번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춘원 이광수는 1922년 「민족개조론」

에서 우리나라가 패망하고 쇠퇴한 것은 조선왕조의 악정 탓인데 그것 때문에 정치분란, 산업쇠퇴, 교육나태와 정신타락이 초래되었다고 외쳤다. 이 나라가 온통 썩어 아사상태에 빠졌으니 민족을 살리려면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굵은 것은 피야한다고 호소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족은 개조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자들이 춘원을 혼자 잘난 체하는 배신자로 몰아 부쳤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는다.

부정부패의 또다른 형태는 각 부처안에 만연되고 있는 업무의 割據主義이다. 도망병의 총기난사 사건이 나면 서로 자기네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이 관리의 생리인데 원자력사업의 경우 관련부서가 서로 자기네 고유업무라며 의견이 상충하는 통에 그 고래싸움에 끼인 실무진이 지난날 그 얼마나 골탕먹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번의 문민정부에서는 실무자가 두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도록 과감한 교통정리를 단행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주어진 직무를 유기하는 무사안일식 타성으로는 신한국 창조가 口頭禪에 그치고 말 것이므로 구호보다 실천을 중요시하여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다가오는 온갖 도전을 이겨내야만 한 단계 위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새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원자력발전소의 부지선정에 대한 단안을 하루속히 내려야 한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

면 반핵분자들의 편견과 거짓말 또는 지역이기주의자들의 억지때에 이끌려 가선 안된다.

앞으로 거품경제의 상징인 花環文化는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최한 국제행사에 참석하였던 멕시코 친구가 단상에 진열된 화환들을 보더니 마치 장례식 기분이 난다고 한 것은 스페인 문화권에선 장례식 때 화환을 놓기 때문이다. 장례식 때 화환수가 많고 화려하면 산에서 무덤을 일굴 때 인건비를 몇배 더 바가지 쓰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화환증정은 받는 이에게 오히려 부담을 안겨준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화환처럼 처음 진열할 때 뿐이고 나중엔 시들어 죽고마는 것같은 원자력정책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중단없는 전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口號보다 實踐을

앞으로 우리는 그간 쌓아올린 국산화기술을 발판삼아 한국형 원자

로를 몇기 더 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원자력기술의 조기 토착화를 기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PWR 600MW급 다음에 PWR 1,300MW급으로 뛰어 올랐어야 하였는데 현실에 안주하려는 보수성에 얽매어 지금처럼 되고만 것은 아쉬운 일이다. 다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 때문이었다면 탓할 수도 없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21세기 초부터 가동될 신형원자로들은 분명코 남북통일후 북한에는 물론 만주와 沿海州까지도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PWR 1,300MW급 7과 대용량의 CANDU 3의 비율로 가야 한다. 아울러 송전전압의 승압, 핵연료주기의 선진화, 부품의 표준화, 기술기준 정립, 인력양성 그리고 효율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적 인허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성이 의문시되고 아직도 개발단계인 연구과제는 국제협력에 의

한 동향과의 정도에 그치고 본격적인 일은 우리 중순자들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거의 동시에 준공될 포항공대의 방사광가속기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30MW급 연구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으로 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를 망라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지 않고선 이 방대한 연구시설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망한 연구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역시 보다 확대보급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아쉽다.

위에 말한 과제들은 과학기술개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그것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 이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이를 지원할 연구개발이 수반되어야 함은 제론의 여지가 없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안 행정체제의 단일화와 간소화를 기하는 것은 새 정부가 단행하여야 할 초미의 과제이다. 우리 기술기준에 입각하여 설계 엔지니어링 1을 수출하면 건설분야에는 7, 기자재산업에는 13의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 정부는 이제 뿌리내리기 시작한 원자력산업에 물과 비료를 꾸준히 주고 햇빛이 잘 들게 함은 물론 폭풍우가 어린 새싹을 휩쓸지 않도록 울타리 노릇을 해주기 바란다. ▣

